

언론사 대학평가의 공과2

- 중앙일보 대학평가를 중심으로

강홍준 | 중앙일보 사회부문 기자 / 중앙일보 교육개발연구소 소장

언론사의 대학평가는 대학교육의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영향력 측면에서 막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대학으로부터 저항을 받기도 한다. 그 논리는 이렇다.

대학행정 또는 교육에 있어서 비전문가인 언론사가 어떻게 대학을 평가하느냐는 것이다. 또한, 질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보다는 양적인 평가 위주로 진행된다 보니 외부평가 때문에 대학교육이 왜곡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전자가 1990년대 주로 나온 비판이라면 후자는 2000년 들어 제기돼 왔다. 이런 과정에서 두 가지 비판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사실 언론사에 의한 평가는 인증이 아니다. 순위를 내는 랭킹 시스템이다. 1983년 미국 주간지 'US News & World Report'가 대학평가를 시작한 이래 세계 각국에서는 대학의 국내·외 위상을

타 대학과 비교 분석해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대학평가(랭킹)가 일반화돼 왔다. 한국 역시 1994년 중앙일보가 대학평가를 시작한 이래 다른 언론사에 의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외국의 연구 조사에서도 대학의 평가가 대학은 물론 대학을 선택하는 학생 집단, 고등교육 정책결정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있을 정도로 외국 역시 언론사에 의한 평가가 대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엔 특히 외부 기관 평가 기준에 자체 대학평가를 시행하거나 이에 맞춰 대학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는 등 평가가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국립대의 자체 평가에서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활용 사례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1〉 모 국립대학의 대학 자체평가 기준과 중앙일보 평가 기준

항 목	중앙일보 평가	대학 자체평가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3	3
졸업 후 진로에 관한 사항	1	1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3	3
연구 성과에 관한 사항	6	3
예결산에 관한 사항	4	4
학교 발전 및 특성화 계획	-	1
교원 연구, 학생에 대한 교육사항	8	9
도서관 및 연구 지원 사항	1	3
기타 교육여건, 학교 운영상태	1	3
전체 지표 수	27	30

또한 올해 한 사립대의 자체 평가 기준 역시 중 양일보 대학평가 기준에서 대부분 차용해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2〉 사립대의 대학 자체평가와 중앙일보 대학평가 비교

분 야	중앙대 자체평가 지표	중앙일보 대학평가 지표와 비교
교육여건 및 재정	학생당 외부장학금 규모	동일
	교원당 발전기금 기부 및 유치액	유사(중앙일보는 세입 중 기부금)
학 생	신입생 총원율	동일
	재학생 총원율	동일
	중도 탈락률	동일
연 구	교원당 논문	동일
	교원당 대외연구비	동일
	교원당 특허	동일
취업 및 만족도	교원당 기술이전 수익료	동일
	취업률	동일
	재학생 만족도	상이

사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2011년부터 기관평가인증제를 시행을 추진하면서 도입을 밝힌 기관평가인증제 중 필수 평가 준거(대학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대학들

은 반드시 이 지표의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하는 기준)에서도 중앙일보 대학평가 지표와 동일한 내용이 활용되고 있다.

〈표3〉 기관평가인증제 필수 평가 준거와 중앙일보 대학평가 지표의 비교

분 야	준 거 명	중앙일보 대학평가 지표와 비교
교육여건	전임교원 확보율	동일
	교사 확보율	상이
교육 만족도	신입생 충원율	동일
	재학생 충원율	동일
재정 건전성	교육비 환원율	동일
학생지원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동일

그렇다면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영향력이 이렇게 커지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아무래도 대학평가가 시작된 1994년만 하더라도 대학 관련 정보는 거의 공개되지 않았던 과거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현재 대학정보알리미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런 제도는 없었으며, 대학과 관련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한 것은 중앙일보 대학평가만이 유일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학 관련 자료의 공개와 공유도 그 영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중앙일보가 평가에 활용하는 자료들은 상당 부분

공개되며, 2007년 이후부터는 평가 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 어떠한 자료들이 입력되는지 평가 대상인 대학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의 범위를 넓혀왔다.

대교협이 또한 90년대 말과 2000년대 중반까지 대학평가를 시행했으나 결국 제자리를 잡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대교협이 회원 단체인 대학을 평가한다는 구조적인 한계, 데이터의 공개와 공유의 실패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문제점

중앙일보를 포함해 국내 대학들이 영향을 받는 각종 외부평가 지표는 정량적 평가 지표 위주, 연구 중심 위주, 산출 지표 위주로 구성돼 있으며, 정성적 평가 지표는 설문 조사 결과로 구성돼 있다.

예를 들어 상해교통대, 대만 고등교육인증위원회 평가의 정량(산출) 지표는 100% 연구 관련 지표다. 중앙일보는 정량(산출) 지표는 주로 교수연구

부문(90점, 전체의 25.7%)에 해당된다. 설문 조사 결과에 근거로 한 정성적 지표 비중은 QS 랭킹(45%)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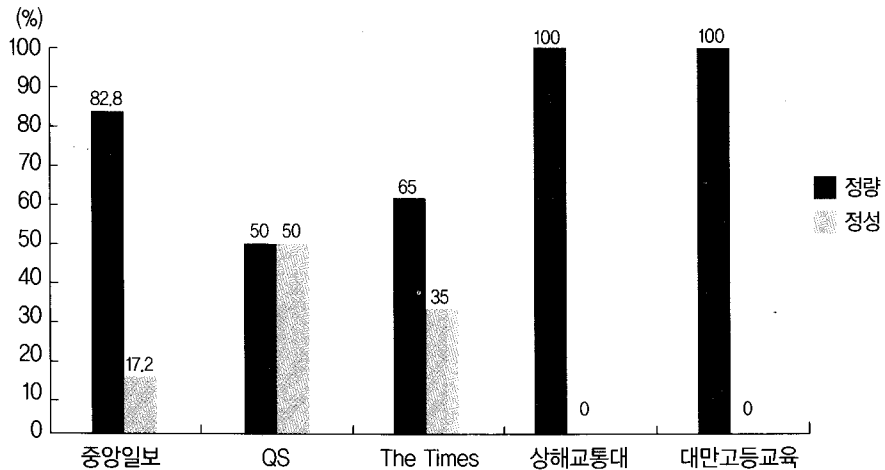
〈표4〉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비중 비교

구분	중앙일보	QS	The Time	상해교통대	대만
정량	82.8	50	65	100	100
정성	17.2	50	35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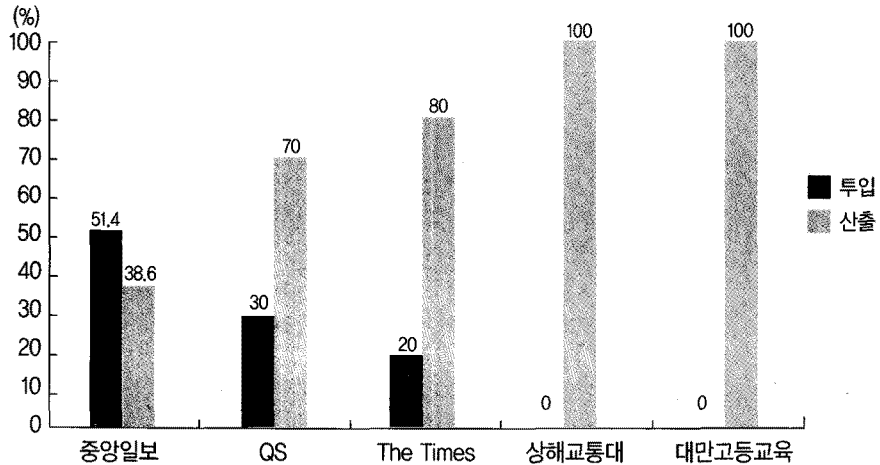
〈표5〉 투입지표와 산출지표 비중

구분	중앙일보	QS	The Time	상해교통대	대만
투입	51.4	30	20	0	0
산출	38.6	70	80	100	100

〈그림1〉 대학평가 정량 정성지표 비중(%)



〈그림2〉 대학평가 투입 산출지표 비중(%)



이런 방식의 지표 구성은 결국 순위를 내기 위한 획일적인 기준을 대학에 적용한다는 문제점을 낳는다. 이로써 대학이 단일한 발전 모형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대학들이 지향해야 하는 특성화와 대학들의 운영 목적이 서로 상이한데도 동일한 잣대에 의해 평가를 실시할 경우 획일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성화 상실, 몰개성화 초래 등의 문제는 중앙일보를 포함한 외부 대학평가가 극복해야 할 최대의 문제점이다.

또한 연구성과 위주의 평가 지표가 활용됨에 따라 전국 200개 일반대가 연구 중심 대학 모델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연구 논문 수 등 양적 성장 중심의 평가로 인한 교육의 질적 저하의 문제도 있다. 연구 논문 수를 중시하는 대학 평가로 인해 논문 수 늘리기 경쟁이 벌

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언론사 평가로 인해 국제 수준의 학술지 논문 수가 많아진 것은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으나 후속 연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 논문은 부족한 실정이다.

중앙일보가 SCI(과학논문인용색인) 등재된 국내 연구자의 논문 중 단 한 번도 인용되지 못한 '무피인용 논문' 비중을 조사한 결과 전체 논문의 49%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밖에 중앙일보 대학평가로 인해 대학이 교수들의 연구 논문 수를 늘리는데 집중하다 보니 학부 학생 교육은 등한시해 교육의 질은 떨어진다는 주장(국가교육과학기술위원회 보고서)도 있다.

언론사에 의한 대학평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이상으로 언급한 문제 외에도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언론사에 의한 대학평가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엔 대교협이 총장 일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언론사,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핵심은 중앙일보 대학평가가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대학이 들 수 있도록 대학의 의견을 듣고, 지속적으로 개혁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앙일보 대학평가 개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곳은 자문단이다. 자문단은 전국기획처(실)장들의 공식 협의기구인 전국기획처장협의회가 위촉한 8명의 위원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자문단은 중앙일보 측이 선임하는 게 아니다. 협의회가 국공립대, 사립대 등을 감안해 선임한 8명을 중앙일보 측이 그대로 받아들여 구성하고 있다. 자문단이 형식적인 자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지표 구성, 가중치 문제 등 전반에 대해 결정을 하며, 중앙일보는 이를 이행하는 구조로 돼 있다.

우선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대학이 인적, 물질, 사회적 자원을 활용해 교육과 연구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수한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행위

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대학이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배출하며, 세롭고 쓸모 있는 지식을 생산해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평가는 지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평가 지표는 대학의 기본 활동인 교육, 연구, 사회적 기여를 균형 있게 담아야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를 위한 평가 지표는 양적인 통계치든 질적인 정보든 계량적으로 표시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한 시점의 특성뿐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도 측정하도록 구성하되 대학이 노력함에 따라 개선 가능한 가능성을 포함하려 한다.

이런 원칙에 따라 2012년 대학평가부터 교육과 관련한 신규 지표들이 도입될 예정으로 있으며, 어느 지표를 선택할지는 자문단이 2010년 2학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대학들이 노력한 만큼 지표에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 지표에 담겠다는 취지는 사실 2010년 평가에서 일부 시행되기도 했다. 자문단의 결정에 따라 Z값 점수 합산 방식을 바꿔 대학이 노력한 만큼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바꾼 게 그 예이다. 또한 대학평가 발표 이전에 평가 과정에 들어가는 각종 데이터들을 사전에 대학에 공개해 사전 검증을 받는 과정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평가에서는 평가 결과 발표 이전에 모든 대학의 연구비, 국제논문 등의 자료를 한꺼번에 공개하기도 했다.

평가 결과 공개 이후 자료 제공의 폭을 넓히는 한편 대학이 원할 경우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해 대학

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핵심은 공개와 공유다. 순위 내기와 서열화가 목표가 아니다. 공개와 공유의 힘은 대학의 변화를 지원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 ■

필·자·소·개

강홍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석사를 취득하였다. 1992년 중앙일보에 입사하여, 2000년부터 교육부 출입기자로 활동했으며, 2000년부터 2001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등 총 6년 간 중앙일보 대학평가팀장을 맡아 대학평가를 책임져왔다.